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조건 후퇴 추진하려는 박근혜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자본주의 우선순위에 따른 계급 차별 문제가 있다. 이윤지상주의가 노동계급 사람들의 생명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의 최상위 통치자로서 박근혜는 책임전가로 일관해 왔다. 오히려 '이번 사고로 소비심리가 위축돼선 안 된다'며 기업주들 돈벌이 걱정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박근혜가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마음에도 없는 눈물을 짜냈다. '국민 검사'로 불리던 안대희를 새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국정원장 남재준 등을 교체하기로 했다.

계급적 분노가 정권 책임론으로 번져 대중적 저항으로 발전할까 봐 두려워하

는 것이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뒤로는 경찰 탄압도 늘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시위 참가자 수백명을 연행하고, 교사선언에 징계의 칼을 들이대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시신 탈취와 지도부 구속 등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다가 들켰다.

박근혜가 밝힌 "국가 개조"도 기만이다. 국가 불신 정서를 역이용해 연금 삭감 등 애먼 하위직 공무원을 때려잡으려 한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 노동조건 후퇴 등을 알맹이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부문 '정상화'도 가속화하겠다고 한다. 이런 친기업 정책들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데도 말이다.

고위 관료들의 퇴직 후 재취업을 규제

한다는 것도 조삼모사다. 박근혜는 대신 관료직 자체에 더 많은 '민간(사실상 친기업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겠다고 했다. 정경유착을 합법으로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새 총리 내정자 안대희는 2003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수사 때 유독 박근혜만 무죄로 풀어 준 전력이 있다.

대국민 담화 이후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빠져나가려는 박근혜를 그대로 뒤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이미 박근혜 퇴진 투쟁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정부를 더 깊은 정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힘을 동원해야 할 때다.

속죄양 만들고 국면 전환?

그러나 박근혜에게 커다란 책임이 있다

박근혜는 말로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도 진짜 책임은 철저히 외면했다.

박근혜는 "해경의 구조업무가 실패"라며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키고, ...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경의 구조 업무는 박근혜가 '해체'했다. 올해 초 정부의 예산 삭감 지시로 각 지방 해양경찰청의 수색구조계가 없어졌다. 이 부서는 '인명 구조, 수난 구호명령, 선박 좌초·전복 대처' 등을 맡고 있었다. 현 정부야말로 역대 최초로 재난관리 예산을 줄여왔다.

박근혜는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박의 과적과 화물 결박 현장 점검을 문서 제출로 하게 해 감독 기능을 없앤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다. 선장의 선박 안전관리 보고 의무도 없었다.

박근혜는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기업의 사익 추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들을 "처부술 원수"라며 '전쟁을 벌이자고 선동한 것은 바로 박근혜다.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회피한 삼성을 감싸며,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저버린 것도 박근혜다.



분노를 사용자의 이윤 쪽으로도 돌려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이윤지상주의 시스템이 정당하냐라는 사회적 물음이 제기됐다.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윤을 우선해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던진 자본주의 체제

의 우선순위 문제는 그동안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외쳐 온 노동자투쟁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보여줬다.

노동운동이 주력해 온 철도와 의료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 작업장 안전 등은 모두 이윤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문제들이며, 보통 사람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과 떨어져 있지 않다.

노동자들은 이런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진정으로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예컨대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일자리를 지켰을 때 공공서비스를 방어할 수 있고, 화물 노동자들은 적정 운송료를 보장받을

때 과적, 과속의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러려면, 거리 시위에 참가해 항의할 뿐 아니라 작업장에서 노동계급 고유의 투쟁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이윤 우선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 다른 참사를 낳을 의료·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5월 중에 원격 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도 6개월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SK, LG전자 등이 참가한 시범사업에서도 원격 의료는 치료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벽지의 노인들을 위해서라는 말도 믿기 어렵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보건소와 이동 진료용 병원 선이다.

원격 의료의 허용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만 배를 볼릴 것이 뻔하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 '결합상품' 판매로 통신비도 늘 수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위험도 크다.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과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병원의 영리 행위를 허용하는 조처다. 현행 의료법이 명백히 '영리



5월 14일 명동에서 열린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 - 세월호 참사 후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올해 화물 운송 분야를

자회사로 떼어낼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철도를 분할해 민영화해 나가려는 것이다.

정부는 분할 민영화를 위해 역 무인화

와 외주화, 열차 정비 축소, 기관사 1인 승무 도입 확대, 선로시설 보수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변압기 폭발 사고 등은 이런 조처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 줬다. 철도 노동자 강제 전출도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 민영화를 위해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은 100만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대책위를 건설하는 등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을 모아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6월 파업 계획을 확정했다. 철도노조도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결정했다.

또 다른 참사와 재앙을 낳을 박근혜의 의료·철도 민영화 추진을 저지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민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는 연대가 절실하다

삼성의 악랄한 노동 탄압이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였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고인은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라고 했다.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고소고발, 표적 탄압, 생계 압박 등 온갖 악랄한 탄압을 자행한 이견희·이재용이 바로 살인범들이다.

경찰은 장례식장에 난입해 시신마저 탈취했다. 경찰은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친모에게 최루액을 뿌렸다. "승리할 때까지 [시신을] 안치"해 달라는 고인의 유언은 무참하게 짓밟혔다.

그리고도 경찰은 오히려 위영일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3명을 구속까지 했다. 지도부들을 구속해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열사의 염원"이라며 투쟁

을 이어가고 있다.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5월 19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 투쟁은 75년간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권을 짓밟아온 삼성에 맞선 투쟁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노조 설립에 성공해 삼성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도 "삼성전

자서비스의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이 어찌 면 다시는 접할 수 없는 '대(對)삼성 투쟁'의 절체절명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한 것이다.

또한 이 투쟁은 단단계 하도급으로 인건비를 줄이면서 노동자들을 악조건으로 몰아넣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투쟁이다. 그래서 삼성뿐 아니라 하도급으로 이익을 누려 온 기업들과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이

투쟁은 중요하다.

이 투쟁의 중요성을 생각해서라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거대한 적에 맞서 홀로 싸우도록 남겨둬서는 안 된다.

지금 노동자들은 맨 바닥에 몸을 누이고, 라면과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농성장 지지방문을 조직하고, 투쟁 기금을 모아 전달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특히 금속노조의 책임이 막중하다. 금속노조는 기층 조합원들이 광범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연대를 조직해 투쟁을 뒷받침해야 한다. 삼성에 맞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전교조 교사대회에서 1천만 원이 넘는 투쟁 기금이 모금됐다. 이런 연대는 더 확대돼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투쟁 기금을 보냅니다!

계좌번호: 754-20-083257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최경환 (삼성전자서비스지회)